

공 개



의안번호	제 335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9. 23. (제 17 차)

의
결
사
항

(주)파운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9. 23.

1. 의결주문

(주)파운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파운트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주)파운트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기간 연장의 타당성,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 금융시장 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파운트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9.21.)

(별지)

(주)파운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주)파운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상호 : (주)파운트

2. 지정기간의 연장

○ (주)파운트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

- 당초 지정기간 : 서비스 개시일(2019. 10월 예정)로부터 1년(최대 2020. 10월말까지)

- 연장된 지정기간 : 2020년 11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3. 기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유지

- 특히, 소비자 보호방안(부가조건)과 관련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분산 ID를 발급·검증하는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간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필요

4. 결정일 : 2020. 9. 23.

(붙임1)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3.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4.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20.1.)

II.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자연인인 명의인 또는 법인인 명의인의 대표자등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원본,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그 대표자등의 실명확인증표를 포함)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
- * 예 : ①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②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③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Ⅲ.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① ~ 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 (의무사항)

* 예시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④기존계좌 활용

○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 (권고사항)

* - ①~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방식 등을 추가 적용

-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예시 : ① + ④ + ⑥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① + ② + ⑦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전자금융과	자금세탁방지실 IT·핀테크전략국
연 락 처	02-2100-2950 02-2100-2977	02-3145-7500 02-3145-7420